

베트남전쟁 시기 북한의 대외정책*

김진환

한글요약

1965년 한·일 관계정상화로 미국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미·일 삼각동맹이 완성됐다. 반면에 사회주의 진영은 중·소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분열과 갈등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한·미·일 삼각동맹에 맞서는데 점점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이 와중에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마저 승리한다면 북한의 안보불안은 한층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북한에게 베트남전쟁은 단순히 “싸우는 베트남 인민”과 “미제”의 전쟁이 아니었다. 북한에게 베트남전쟁은 궁극적으로는 북한 자신에게 가해질 안보위협을 미연에 막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야만 했던 전쟁이었다.

1960년대 초반부터 중·소 분쟁에 적극 개입하며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주장하던 북한은 1960년대 중반 들어 베트남전쟁이 과거 한국전쟁처럼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맞대결 성격을 띠게 되자 사회주의 진영의 ‘반제공동투쟁’을 선도적으로 주장하고 전투병 파병에도 솔선수범했다. 하지만 북한의 기대나 바람과는 달리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은 갈수록 심화됐다. 반대로 일본 군국주의는 완전히 부활하자 1970년대 들어서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의 반제공동투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낮추고, 아시아 혁명적 인민들의 반제공동투쟁, 반미반일투쟁을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북한은 베트남전쟁 초기 남한에서 반전인식을 매개로 남조선혁명의 기운이 무르익기를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남한의 반전운동은 일어나지 않았

김진환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61-A00008).

고, 오히려 자신의 모험주의적 군사행동 탓에 남조선혁명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자 박정희 정부와의 대화노선으로 전환했다. 더불어 미군이 1973년 3월 베트남에서 완전 철수하자 7·4남북공동성명의 반외세 조항, 베트남에서 미군의 완전 철수 등을 명분으로 삼아 미국에게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완전 철수 등을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베트남전쟁 기간 동안 동북아시아에서 거의 외교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국가들, 아시아의 혁명적 나라들은 북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열과 갈등상태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남조선혁명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고, 북한은 오히려 박정희 정부를 대화상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일축했고, 북한이 바라던 주한미군 철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북한이 느끼는 안보불안은 나날이 커져갔다.

주요어

한·미·일 삼각동맹, 중·소 분쟁, 반제공동투쟁, 베트남전쟁, 남조선혁명

1. 머리말

2000년 3월 26일, 전날 천득령 베트남 주석 예방을 마친 백남순 북한 외무상은 하노이에서 동북쪽으로 60km 떨어진 박장성의 한 마을로 차를 달렸다. 그곳에는 베트남전쟁에서 전사한 북한 전투기 조종사 14명이 함께 묻혀 있었다. 참배를 마친 백 외무상은 ‘전몰장병들이여 영원하라’는 붉은 글씨가 새겨진 위령탑 앞에 화환을 남겨두고 떠났다. 그리고 며칠 뒤, 백남순 외무상 일행의 행적을 쫓던 권쾌현 『연합뉴스』 베트남특파원이 바로 그 묘지와 위령탑을 찾아가 백 외무상이 두고 간 화환을 확인함으로써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은 종전 25년 만에 ‘풍문’에서 마침내 ‘사실’이 됐다.¹⁾

1) 권쾌현 특파원은 2000년 3월 29일 북한의 베트남전 참전 사실을 특종으로 보도한 뒤, 베트남 외교부로부터 한 번 더 베트남 국익에 반대되는 기사를 쓸 경우 추방하겠다는 엄중 경고를 받았다(권쾌현, 2010: 70). 그만큼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은 북한, 베트남 모두가 감추려 했던 비밀이었다. 두 나라가 왜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 사실을 감춰왔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자적인’ 대미 승전을 강조하려는 베트남

권래현 특파원의 기사가 나간 직후인 2000년 4월 3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 인민무력성 청사 혁명사적관에 최근 개설한 ‘국제주의관’ 탐방 기사 형식으로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 전모를 처음으로 간략하게 밝혔다. 북한이 1964년부터 1969년까지 베트남전쟁에 “무기 10만 정, 군복 100만 벌을 지원했으며 비행부대와 공병부대를 현지에 파견, 하노이 영공권을 제압”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은 한국전쟁 이후 ‘첫’ 파병이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베트남전쟁 비행부대 파병은 베트남 민주공화국(이하 북베트남)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이었다.²⁾ 이미 1960년대 초반부터 자원 투입에 의존한 외연적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딪치고, 소련·중국과의 연이은 갈등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자원 도입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1960년대 중반 북한 경제성장률은 눈에 띄게 둔화되는 중이었다(이태섭, 2001: 245~353).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왜 경제적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베트남전쟁에 참전했을까?

한국전쟁 때 북베트남이 북한에 보여준 우애³⁾에 보답하려는 행위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겠지만, 북한 자신이 이러한 이유를 언급한 적이 없고,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을 고려할 때 설득력 있는 분석이 되기는 어렵다. 선행 연구는 북한이 베트남전쟁 승리로 국제혁명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따라 조선혁명 승리도 앞당기기 위해 북베트남을 지원했다거나(조진구, 2003: 239~240), 북한이 1960년대 중·소분쟁 와중에 반미공동투쟁을 촉구하고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고

에게 북한이 협조했다거나, 베트남이 한국·미국과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며 북한에게 북한 참전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거나, 북한이 탈냉전기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베트남전쟁 참전 사실을 감추고 싶어 했다는 식이다. 여러 가설들을 검증해볼 수 있는 자료가 공개·발굴된다면 동아시아사의 맥락에서 베트남전쟁을 한층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北공군 베트남전 참전 공식문서 확인”, 『연합뉴스』 2011년 12월 5일.

3) 북베트남은 1952년 7월에 북한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1951년 8월에는 대표단을 북한에 직접 보내 북한 농민 대표자들과 좌담회를 갖고 평양 시내 공장을 시찰했으며, 한창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동부전선의 월비산 고지를 방문해 전투를 둘러하기도 했다(윤대영, 2013: 193~194).

분석한다(이상숙, 2007: 156~164). 곧 북한의 북베트남 지원, 베트남전쟁 참전의 공세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선행 연구는 북한이 1960년대 후반 대남 군사도발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베트남 인민의 대미 선전(善戰)을 목격하면서 남조선혁명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해 적극적인 대남혁명노선에 나섰다거나(조진구, 2003: 253), 북한이 베트남 전쟁 지원 차원에서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했다고 분석한다(이상숙, 2007: 162~164).

이 글에서는 이와 달리 북한의 북베트남 지원, 베트남전쟁 참전이 중국과 소련의 분쟁 격화,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 심화, 한·미·일 삼각동맹 출현, 일본 군국주의 부활 같은 다층적이고 급격한 정세 변화에 위기감을 느낀 북한의 주동적이면서도 방어적인 대응책이었다는 점, 더불어 당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이 “북베트남이라는 교과서를 보고 한국에서의 게릴라전에 대비한 기지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거나(조진구, 2003: 229), 베트남전쟁 승리를 지원하기 위한 행위였다기보다는 남조선혁명에 유리한 남한정세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오관’을 근거로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 등을 밝혀보려 한다.

2.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 : 이유와 양상

미국이 북베트남을 폭격하며 베트남전쟁을 ‘미국의 전쟁’으로 만든 1964년 8월 전후, 동북아시아 정세는 북한의 안보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자본주의 진영의 한국, 미국, 일본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시작(1964년 9월),⁴⁾ 한·일기본조약 가조인(1965년 2월) 등으로 ‘삼각동맹’으로 부를 수 있을 만큼 단결의 기운을 높여가던 반면, 북한 안보의 든든한 후원자 노릇을 해야 할 사회주의 진영은 1950년대 후반 시작된

4) 1964년 9월 한국 정부는 130명의 이동외과병원 요원과 10명의 태권도 교관을 남베트남에 처음으로 보냈다. 이후 2천 명 규모의 ‘비전투병’ 파병(1965년 3월), 본격적인 전투병 파병(1965년 10월~11월)이 이어졌다(홍석률, 2009: 220~223).

중·소갈등의 자장(磁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점점 더 분열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었던 것이다.

소련과 중국 사이는 소련공산당이 1950년대 후반 ‘평화공존론’, ‘전쟁가피론’을 주장하며 벌어지기 시작해, 1960년 들어 중국공산당이 소련공산당을 ‘수정주의’, 소련공산당은 중국공산당을 ‘교조주의’로 규정하며 비난할 정도로 가열됐다(이종석, 2000: 216~218). 그리고 곧이어 소련과 북한 사이도 벌어지고 만다. 중·소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라 가열되던 1962년 봄까지만 해도 북한은 반제투쟁을 그만둘 수는 없다며 ‘수정주의’를 비판하기는 했지만, 소련을 치경해서 비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소련이 1962년 여름 코메콘(동유럽상호경제원조회의, COMECON) 총회 이후 북한도 사회주의권 경제 통합에 동참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곧이어 쿠바 미사일 사태(1962년 10월), 소련이 사실상 인도를 편든 중국-인도 국경전쟁(1962년 10월~11월) 등이 이어지자 마침내 북한은 전쟁 공포증에 걸려 제국주의에 투항했다며 소련을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다(이태섭, 2001: 284~289).

1962년에 본격화된 북·소 갈등은 소련이 1964년 6월 평양에서 열린 아시아경제토론회에 대해 중국식 경제발전 노선의 선전장이었다고 비난하고, 북한이 1964년 9월 7일자 『로동신문』 사설 「왜 평양 경제 토론회의 성과를 중상하려 드는가」에서 소련의 북한 내정 간섭 증지를 강하게 요구하며 정점에 도달했다(이태섭, 2001: 289; 이상숙, 2007: 155). 몇 달 뒤인 1964년 10월 브레즈네프를 중심으로 한 소련의 새 지도부 등장 이후 북·소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했지만⁵⁾, 이번에는 바로 그 소련 지도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북·중관계가 어색해졌다. 북한은 소련 새 지도부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반면, 중국은 이들의 노선을 흐루시초프 노선의 아류로 규정하며 여전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이종석, 2000: 237~240).

5) 북·소 갈등은 1964년 10월 흐루시초프 실각을 계기로 그해 11월 김 일 부수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이 소련을 방문하고, 1965년 코시킨 수상을 단장으로 한 소련 대표단이 방북해 내정 불간섭, 제국주의 반대 등에 입장을 같이 함으로써 진화했다(이태섭, 2001: 289).

이처럼 북·소갈등은 어느 정도 수습됐지만, 중·소 대립 또는 세계 사회주의 국가들이 각각 중국과 소련을 지지하며 대립하는 분열상은 수습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던 와중에, 미국은 1964년 가을 이후 ‘북폭 논쟁’에 중지부를 찍고 1965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북베트남에 폭탄을 쏟아 붓기 시작했다(유인선, 2002: 410~412). 북위 17도선 이북 ‘사회주의 국가’(베트남민주공화국)로까지 전선이 확대되면서, 베트남전쟁이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대결이라는 ‘진영전쟁’으로서의 성격을 확실히 갖게 된 것이다.

바로 이 시점부터 북한은 베트남전쟁을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이는 궁극적으로 북한 자신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을 이끌어 낼 기회로 바라보고 사회주의 국가들, 특히 ‘사회주의 대국’인 소련, 중국을 향해 강하게 ‘반제공동행동’, ‘반제통일전선’을 본격적으로 촉구했다.

먼저 북한은 “월남 인민이 전개하고 있는 영웅적 항전”은 “자신의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의 동남방 초소를 수호하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보위하는 정의의 투쟁”이라고 주장했다(김영남, 1965: 8). 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1966년 10월 조선노동당 2차 대표자회에서 김일성이 말했듯이 베트남을 침략한 “미제에 대한 태도”를 “현시기 공산당 및 노동당들의 입장을 검열하는 중요한 척도”로 규정했다(김일성, 1982a: 380).

1965년 3월 22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가 남베트남 해방, 북베트남 수호, 미국에 대한 항전 의지 등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자 북한은 3월 26일에 곧바로 정부 성명을 발표해 베트남 인민에게 무기를 포함한 모든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다할 것이며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군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4월 30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해 4월 10일 북베트남 인민회의가 각 국 국회에 보낸 호소문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김광협, 1988: 136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1988a: 1438). 이 사이 김일성은 일본의 한 통신사 간부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오

를 일부 사회주의나라들 사이에 의견상이가 있으나 그것은 한가정안의 일시 적불화와 같은 것"이라며 사회주의 진영의 "불화"를 솔직히 인정하고, 미국에 힘을 합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일성, 1982b: 331~332).

베트남전쟁 초기 북한의 입장은 북한이 베트남전쟁 참전을 공식 결정했던 최고인민회의의 3기 4차 회의 자료를 통해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1965년 5월 20일에 열린 이 회의의 첫 번째 의안은 베트남전쟁 지원 문제였다. 김광협 내각 부수상은 정부 대표로 제안 설명을 하면서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대결구조, 곧 냉전 질서 안에서 베트남전쟁 지원이 갖는 의의를 아래처럼 정리했다.

현정세하에서 발악하는 제국주의에 더 큰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무엇보다 두려워합니다. (...)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월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발악적으로 확대하며 월남민주공화국에 대한 야만적 폭격을 련일 감행하고 있는 것은 직접 사회주의 진영 전체를 반대하는 침략행위입니다. 월남민주공화국은 사회주의 진영의 불가분의 일환입니다. 월남인민의 주권과 자유가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의하여 침해당할 때에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평안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은 월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전쟁을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김광협, 1988: 1370).

이 중에서 베트남 인민의 주권과 자유가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의해 침해당할 때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도 결코 자유롭거나 평안할 수 없다는 김광협의 발언에는 당시 북한이 느끼던 안보위기감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한편 이 회의의 두 번째 의안은 '전민족이 단합하여 범죄적인 한일회담을 분쇄할 데 대하여'였다. 그해 2월 한·일기본조약을 시작으로 4월에는 재산청구권 문제, 어업 문제, 재일교포 법적 지위문제 등에 대한 협정들까지 가조인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 출현이 눈앞에 다가오자 북한은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진영의 반제공동투쟁을 촉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침략적

군사동맹”으로 규정한다⁶⁾ 한·미·일 삼각동맹 출현을 지연시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바람이나 안보위기감이 무색하게, 사회주의 대국들은 공동행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베트남전쟁 지원 문제로 중·소 대립은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였다.

중국은 북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기에 미국의 베트남전쟁 개입으로 인한 안보위기감은 당연히 중국이 소련보다 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1965년 2월 북베트남 폭격을 전면화하자 4월 4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지방 당 조직과 인민해방군에 베트남 인민과 함께 미국과 싸울 각오를 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4월 초 레주언 베트남노동당 제1서기의 지원 요청을 받아들여 6월 초부터 지원부대를 북베트남에 파견하기 시작했다(조진구, 2003: 237~238). 이로부터 1973년 3월까지 고사포부대, 철도건설부대, 도로보수부대 등 총 32만 여 명의 중국 병사들이 북베트남에서 활동했다. 다만, 이들은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는 않고 주로 미군 폭격으로 파괴된 도로 보수, 새로운 철도 건설 등에 투입됐다. 또한 중국은 북베트남에 소총, 대포, 탄환, 포탄 같은 무기를 제공하고, 식료품이나 여타 물자 부족으로 압박을 받지 않도록 생필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했다(유인선, 2002: 389~390, 397~398).

하지만 중국은 소련의 북베트남 지원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소련이 중국을 제치고 베트남 문제를 주도하려는 의도 또는 소련이 북베트남과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의도⁷⁾가 깔려 있다고 의심했던

6) “미 제국주의자들은 재생된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돌격대로 하여 아세아 지역의 괴뢰들을 하나의 침략적 군사동맹에 묶어 놓으려고 오래전부터 획책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침략적 군사동맹을 결성하기 위하여 그들에게는 우선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들을 결탁시키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따라서 《한일회담》의 조속한 결속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미제가 재생된 일본 군국주의를 골간으로 하여 아세아에서 새로운 군사동맹을 결성하려고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것은 전후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의 전략적 방침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박성철, 1988: 1396). 북한에게 ‘침략적 군사동맹’의 출현은 이전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안보위협요소의 등장을 의미했다.

7)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는 1966년 3월 레주언 베트남노동당 제1서기에게 소련의 원조는 베트남과 중국 사이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유인선, 2002: 392).

것이다. 1965년 2월 10일 베이징을 찾은 코시긴 소련 수상이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북베트남을 지원하자고 제안하자, 오히려 중국은 소련이 베트남 문제를 대미 교섭 재료로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한 소련이 4월 3일 비밀서한을 통해 북베트남 원조에 관한 소련, 중국, 북베트남 3자회담을 제안하고, 2주 뒤에는 소련군 4,000명의 중국 통과, 소련 공군기의 중국 남서부 비행장 사용, 소련 공군기의 중국 영공 통과 등을 요구하자, 중국은 3자회담 대신 중국, 북베트남 2자회담을 가졌고(이상숙, 2007: 157), 북베트남 원조라는 명분 아래 중국을 통제하려 한다며 소련을 비난했다. 우여곡절 끝에 소련의 원조물자와 요원들은 중국을 통과해 북베트남으로 향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소련은 중국이 수송을 방해하고 비행기를 포함한 장비를 가로채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대로 중국은 소련이 원조 지연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려 한다고 응수했다(조진구, 2003: 238~239).

이처럼 중·소가 북한이 간절히 바라던 사회주의 진영 단결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자, 김일성은 1966년 10월 조선노동당 2차 대표자회 보고에서 아래처럼 소련, 중국 모두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제국주의, 무엇보다도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월남에 대한 침략을 확대하고있는 조건에서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은 미제에 대하여 더 랭랭하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국제문제들에서 원칙을 버리고 미제와 타협하는 일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이 제국주의나라들과 외교관계를 가지고있다 하여 여기에 반제투쟁을 용해시키거나 이것으로 하여 반제투쟁을 약화시켜서는 안될것입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외교에서도 웅당 계급적원칙을 견지하고 미제에 압력을 가하며 그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폭로하고 규탄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미제를 반대한다고 큰소리만 치고 미제의 침략을 저지시키기 위한 구체적행동을 취하지 않는것도 잘못입니다. 더우기 반제력량이 단합하여 미제침략자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하는데 난관을 조성하는 일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미제의

침략을 저지시키지 못할뿐만아니라 도리어 미제국주의자들을 더욱 오히려 하고 횡포하게 만들며 결국 그들의 침략행위를 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김일성, 1982a: 380~381).

위 인용문의 “사회주의나라들이 제국주의나라들과 외교관계를 가지고있다 하여 여기에 반제투쟁을 용해시키거나 이것으로 하여 반제투쟁을 약화시켜서는 안될것”이라는 표현은 미국과 외교관계를 갖고 있던 소련을 비판한 것이다.⁸⁾ 한편, “반제력량이 단합하여 미제침략자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하는데 난관을 조성하는 일이 없어야 할것”이라는 표현은 당시 소련의 3자회담 제안을 거절하고,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북베트남 지원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던(유인선, 2002: 396)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다.

또한 김일성은 같은 연설에서 “특히 사회주의나라들은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큰 나라들과는 될수록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주로 월남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며 조선, 꾸바, 동부독일 등 분열되어있는 나라들과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려 하는데 대하여 웅당한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김일성, 1982a: 381). 소련, 중국 같은 “큰 나라들”이 미국의 유화책에 넘어가 “작은 나라들”과 같은 배를 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한 셈인데, 이러한 우려는 실제로 몇 년 뒤 중·미화해로 현실화됐고⁹⁾, 그로 인해 북한의 안보환경은 한층 더 악화된다.

8) 김일성은 같은 연설에서 소련의 새 지도부를 향해 ‘반제공동행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수정주의’와 확실히 단절하라고 촉구했다. 김일성은 당시 소련을 “과오를 범한 벗”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반제공동행동을 거부하는것은 진실로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단결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태도가 아니며 미제를 반대하며 싸우는 월남인민을 지원하려는 립장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 우리는 원쑤와 과오를 범한 벗을 똑똑히 갈라보아야 합니다. 원쑤는 때려야 하며 과오를 범한 벗은 비판하여 옳은 길에 돌려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벗들과 힘을 합쳐 주되는 원쑤를 반대하여 싸워야 할것입니다.”(김일성, 1982a: 401).

9) 1960년대 후반 이후 중·미가 급속히 관계를 진전시키면서 베트남 문제 해결 방식을 놓고 북베트남과 중국의 갈등이 커져 갔다. 훗날 베트남정부는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 중국의 대미화해노선에 대해 베트남혁명, 인도차이나혁명, 세계혁명을 배반하는 행위였다고 평가했다(유인선, 2002: 413~428; 도미엔, 2014: 103~105).

북한은 이미 북베트남과 ‘월남민주공화국에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제공할데 대한 협정’(1965년 7월), ‘무상원조를 제공할데 대한 경제협정’(1966년 1월) 등을 체결해(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82: 454) 북베트남에 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북베트남에 1965년 1,200만 루블을 시작으로 1973년까지 4,180만 루블을 무상 지원했다(도미엔, 2014: 100). 나아가 북한은 1966년 가을에 “사회주의나라들이 월남인민을 정치적으로만 지지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면서(김일성, 1982a: 387~388) 마침내 전투병 파병을 시작했다.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최초로¹⁰⁾ 미국과의 교전을 결정한 것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미 공동투쟁을 촉구하며 출선수범한 셈이다.

북한의 관영 방송은 이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2001년 7월에 1966년 10월 조선노동당 2차 대표자회에서 “피”로써 베트남을 지원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천명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비로소 밝혔다.¹¹⁾ 그런데 2011년 12월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노동당 2차 대표자회에서는 이전에 이루어진 전투병 파병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1966년 9월 21일 베트남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이미 ‘북한의 베트남전 조종사 파견 요청’에 대한 논의가 보 구엔 지압 장군 주재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0) 중국은 베트남전쟁에 막대한 인원을 보냈지만 직접 전투에 나서지는 않았다. 중국은 1965년 4월에 북베트남 지원을 약속했을 때 공군비행사 파병도 약속했지만 7월에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유인선, 2002: 390).

11) “北, 베트남전 참전 최초 공식 확인”, 『연합뉴스』 2001년 7월 6일.



〈그림 1〉 북한이 베트남전쟁에 파병한 공군 조종사들의 모습. ©우드로윌슨센터

곧이어 1966년 9월 24일~30일 반 티엔 등 베트남인민군 참모총장과 최광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 군사대표단이 북한 공군부대 파병을 위한 구체적 사안에 대해 논의했고, 회의 마지막 날 양국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의 핵심은 1966년 10월 말부터 북한이 미그17기 2개 중대(중대 당 전투기 10기), 미그21기 1개 중대로 구성된 독립적인 공군연대를 편성하기 위해 조종사를 파견하며, 북베트남은 북한 조종사들을 위한 전투기, 조종사들의 생활과 전투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이다. 위 문서들을 번역해 보고서를 작성한 베트남전쟁 연구자 멀 프리브나우는 이 합의에 따라 1967년부터 1969년 초까지 북한 조종사 총 89명이 전투에 나서 14명이 전사하고¹²⁾ 미군기 26대를 격추했다는 베트남인민군 퇴역 소장의 주장도 보고서에 덧붙여놓았다(멀 프리브나우, 2012: 92~95).¹³⁾

그런데 1970년대 들어 북한의 베트남전쟁 정책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1970년대 들어 인도차이나반도 전역으로 전쟁이 확대되는 와중에 북한이 반제국동투쟁을 호소하는 대상을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아세아

12) 전사자 14명의 유해는 2002년 북한에 인계돼 ‘조선인민군 영웅렬사묘’에 묻혔다.

13) “北공군 베트남전 참전 공식문서 확인”, 『연합뉴스』 2011년 12월 5일.

의 혁명적나라 인민들”로 바꾸었고¹⁴⁾, 북베트남에 대한 지원은 축소한 것이다. 이 중 후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당시 북한의 대남·대미정책과 관련지어 분석해보기로 하고, 이 장에서는 전자와 같은 변화의 원인과 의미에 대해서 분석해보겠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원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작(1966), 소련을 비롯한 바르샤바조약기구 소속 약 20만 대군이 체코공산당이 추진하던 정치민주화와 경제개혁을 중단시키기 위해 체코를 침공한 사태(1968년 8월), 소련과 중국의 대규모 국경 충돌(1969년 3월) 등으로 중·소대결,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김진환, 2012: 18~24). 북한은 이제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단결이 어떤 계기로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둘째, 미국 닉슨 대통령은 1969년 7월 ‘아시아 안보의 아시아화’를 골자로 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일본에 방위 분담 압력을 가했고, 일본 사토 에이사쿠 내각은 이 기회를 틈타 1969년 11월 닉슨-사토 정상회담에서 한국, 대만 안보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김진환, 2012: 54~56).¹⁵⁾ 이처럼 미국이 일본 군국주의의 재생을¹⁶⁾ 도우면서 캄보디아,

14)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김일성의 발언들은 다음과 같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은 오늘 아세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들을 미제를 반대하는 하나의 공동전선에 결합시키고있습니다. 미제의 직접적인 침략을 당하고있는 조선과 중국, 월남과 라오스, 캄보자를 비롯하여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나라 인민들은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 미제의 아세아침략에 보다 강력한 집단적반격을 가하여야 합니다.”(김일성, 1983a: 319~320). “오늘 아세아에 대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좌절시키기 위하여서는 특히 그들의 침략을 직접 당하고있는 아세아의 혁명적나라 인민들의 반제반미통일 전선을 더욱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아세아의 혁명적인민들의 전투적 단결은 력사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강화발전되어왔습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새로운 침략책동은 조선, 캄보자, 중국, 월남, 라오스를 비롯한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로 하여금 단결을 더욱 강화하게 하여줍니다.”(김일성, 1984a: 228~229).

15) 이미 한·일수교로 사토 내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북한은 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등장한 ‘한국조향’(한국의 안전은 일본에 긴요하다)을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책동을 격화시키려는 미일반동의 흉악한 음모”로 규정했다. 『로동신문』 1960년 11월 24일 사설.

라오스 등지로까지 전쟁을 확대해나가자 북한은 과거에는 ‘일제’에게, 현재는 ‘미제’에게 고통 받고 있고, 앞으로는 ‘부활한 일제’에게 다시 고통 받을 수도 있다는 ‘공동점’을 가지고 있는, 따라서 사회주의 나라들보다 반제공동투쟁, 반미반일투쟁에 더욱 절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아시아 인민들을 향해 반제공동투쟁, 반미반일투쟁을 호소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1971년 4월 최고인민회의 4기 5차 회의 때 허 담 북한 외무상이 했던 보고에는 당시 북한의 의도가 잘 정리되어 담겨 있다.

아세아나라 인민들은 오래동안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혁명투쟁을 함께 벌려 승리한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함께 싸워이겼으며 조선전쟁때에도 한 전호속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눕혔습니다. (...) 인도지나인민들은 프랑스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을 함께 벌려 승리하였으며 지금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역세게 벌리고있습니다. 조선, 중국, 월남과 라오스, 캄보자 인민들을 비롯한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나라 인민들이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여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건결히 벌린다면 능히 그들을 때려눕힐수 있으며 우리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을것입니다(허 담, 1988a: 343).

정리하면 오늘날 북한은 자신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이유가 “형제당, 형제나라들 사이의 의견상이를 좁히고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 수 있었”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는 “형제당, 형제나라들 사이의 의견상이를 좁히고 국제적인 반제공동투쟁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지만(박태호, 1987: 30~31) 이러한 평가와 달리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에 실패했다. 북한

16) 일본 군국주의가 재생했다는 것은 김일성의 판단이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일본군국주의가 재생되었는가 재생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있는데 우리는 일본군국주의가 이미 재생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추측이 아니라 현실적인 자료들에 근거하여 도달한 결론입니다.”(김일성, 1984b: 303).

이 1970년대 들어 일찌감치 사회주의 국가들의 반제공동투쟁에 대한 기대를 접고 “아세아의 혁명적나라 인민들”로 반제공동투쟁 호소 대상을 바꾼 것은, 곧 반제공동투쟁의 새로운 ‘동지’를 시급하게 찾아 나선 것은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이 공세적 차원보다는 방어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회주의 진영의 반제공동투쟁을 촉진하기 위한 술선수법이 표면적인 참전 이유라면, 북·중·소 삼각동맹 약화,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라는 거시적 추세 속에서 만약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마저 승리할 경우, 자신에게 닥쳐올 안보위협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을 근본적·구조적으로 압박했던 것이다.¹⁷⁾ 이러한 북한의 수세적 처지는 아래에서 살펴볼 1970년대 초반 북한 대남·대미정책의 급변을 통해서도 파악해 볼 수 있다.

3. 베트남전쟁과 북한의 대남·대미정책

베트남전쟁 발발 전부터 북한은 ‘남조선혁명’을 ‘전조선혁명’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었고¹⁸⁾, 김일성이 1967년 3월 도, 시, 군 및 공장당 책임비서 협의회에서 했다는 아래 연설처럼 베트남전쟁이 “남조선인민들”의 반전·반정부의식을 각성시켜 남조선혁명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곧, 북한은 단순히 베트남 인민의 대미 선전에 자극 받아서라기 보다는 남한 내 반전·반정부의식의 성장이라는 ‘구체적 가능성’을 염두에

17) 북한은 중·소 분쟁 시기 북·소동맹과 북·중동맹의 ‘주적’인 미국에 대한 소련, 중국의 인식이 변감아 변화하는 과정-소련의 경우는 1962년~1964년, 중국의 경우는 1965년~1966년-속에서 양국으로부터 방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키워나가고 있었다(Jein Do, 2013: 33~213). 북한이 중국, 소련을 향해 베트남전쟁 공동대응, 반미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촉구한 근원에도 이러한 안보위기의식이 놓여 있었다(Jein Do, 2013: 180~213).

18) “우리는 현재단에 있어서의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을 규정하는데서 공화국북반부만 넘두에 두고 우리 나라 령토의 절반과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남반부를 무시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혁명이 전조선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는것과 남북조선이 서로 다른 혁명단계에 놓여있다는 점을 넘두에 두고 우리 혁명의 성격을 규정하여야 합니다.”(김일성, 1980: 200).

두고,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1960년대 후반에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반부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반드시 남조선에서 강력한 혁명력량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남조선인민들은 결코 적들의 거짓선전에 속지 않을것이며 오늘의 사태를 보고만 있지 않을것입니다. 월남전쟁이 오래가면 갈수록, 거기에 끌려가는 괴뢰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남조선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파병책동을 반대하는 세력이 점점 늘어날것입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남조선인민들은 더욱더 각성될것이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원썬들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게 될것입니다(김일성, 1983b: 245).

김일성은 위 연설에서 각급 당 책임비서들에게 “남조선에서 혁명조직을 잘 꾸리고 선전사업을 강화하여 남조선인민들을 하루라도 더 빨리 각성”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김일성, 1983b: 245), 북한의 실제 행동은 김일성이 공개적으로 주문한 것보다 좀 더 과격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1960년대 초반 쿠바 미사일 사태부터 고조되던 ‘북한사회의 군사화’ 흐름¹⁹⁾, 박정희 정부 출범, 베트남전쟁 격화 등은 북한 안에서 민족보위상 김창봉, 당 대남사업총국장 허봉학 같은 군부 강경파들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이들은 1968년 1·21청와대기습사건, 1968년 10월 말~11월 초 울진·삼척무장간첩 남파사건 등을 일으키며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런데 북한이 몇 년 동안 공들여 갖춰놓은 “남조선 혁명조직”인 통일혁명당이 1·21사태 이후인 1968년 8월 발각된 것처럼, 군부 강경파들의 모험주의적 군사행동은 결과적으로 남조선혁명에 지장을 초래했다. 결국 이들은 울진·삼척 침투공작 실패 직후인 1969년 1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 4기 4차 전원회의에서 모두 숙청당했다(홍석률, 2012: 64~67; 황일호,

19) 북한은 쿠바 미사일 사태 직후인 1962년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 방침을 제시하고 전군 간부화와 현대화, 전민 무장화와 요새화를 목표로 독자적인 군사력 증강에 나섰다(당력사연구소, 2006: 319~322).

1993a; 황일호, 1993b). 이 과정에서 김일성이 모험주의적 군사행동을 직접 지시했는지, 아니면 일부 모험주의자들이 김일성 몰래 저지른 단독 행위였는지 등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김일성이 이러한 군사행동에 직접 관여했다면 그가 남조선혁명을 위해 길으로는 “남조선에서 혁명조직을 잘 꾸리고 선전사업을 강화”하자는 방도를 제시하고, 속으로는 게릴라전 같은 군사적 해법을 추구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와 관련해 조선노동당 고위 간부로 일했던 박병엽(필명 황일호)은 김창봉, 허봉학 등이 김일성 몰래 단독으로 이 일들을 진행했다는 증언을 남겼고, 김일성도 1972년 5월 평양을 비밀리에 찾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조선노동당의 노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부 모험주의자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한모니까, 2003: 158~159).²⁰⁾

여하튼 1960년대 후반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은 언뜻 보기에는 “베트남 전선과 한국에서의 전선이 진짜로 연결되는 양상”(홍석률, 2009: 232)이었다. 그렇기에 북한이 베트남전쟁 지원 차원에서 일련의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했다는 분석도(이상숙, 2007: 163)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을 무력 적화통일 기도의 일환으로 파악했던 ‘한국의 시각’과 베트남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했던 ‘미국의 시각’ 중에 후자에 기울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²¹⁾

그렇다면 ‘한국의 시각’은 도발 주체였던 북한의 의도를 오해한 것일까? 달리 질문하면 북한은 남조선혁명, 적화통일을 실제로 의도했다기보다는, 베트남전쟁에 쏠려 있는 한국의 힘과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 대남 군사도

20) 김일성이 이후락에게 말한 것과 달리 직접 대남군사행동을 지시했을 가능성 또는 조선노동당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대남군사행동을 결정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공개되거나 발굴되지는 않았다. 이 탓에 김일성이 1960년대 후반 한반도 긴장고조에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되기는 했지만, 활발한 논쟁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21) 이러한 분류와 평가는 아래 인용한 홍석률의 지적을 참고로 했다. “1968년 안보위기 외중에 발생한 한미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양국의 기본적인 시각차 때문이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무력 적화통일 기도의 일환으로 파악했고, 반면 미국은 베트남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시각차이가 나타난 것은 근본적으로 세계질서 속에서 미국과 한국이 갖는 위상의 차이 때문이었다.”(홍석률, 2009: 234).

발을 단행한 것일까? 1960년대 중반 이후 김일성의 여러 발언과 대남 군사도발의 과격했던 양상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시각’이 ‘미국의 시각’보다 좀 더 타당한 분석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제2의 베트남전쟁’을 수행하려 했다고보다는, 비록 그것이 남조선혁명에 유리한 남한정세가 도래할 것이라는 ‘오관’을 근거로 이루어진 행위였다 하더라도 남조선혁명이라는 자신의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이해에 따라 ‘제2의 한국전쟁’을 수행하려 했던 것 같다. 물론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이 성공했다면 북베트남에게도 유리할 수 있었겠지만,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을 하게 된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이유가 베트남전쟁 지원이었는지는 아직까지도 의문스럽다.²²⁾

한편 김일성은 베트남전쟁 초기부터 미국이 패배해서 힘이 약화되면 조국통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²³⁾ 그런데 1960년대에 김일성이 말하던 조국통일은 어디까지나 남조선혁명의 진전 또는 승리를 통한 조국통일이었지²⁴⁾, 남한 집권세력, 곧 박정희 정부와의 대화를 통한 조국통일이 아니었다. 당시 남조선혁명을 추구하던 북한에게 박정희 정부는 통일을 논의할 대상이 아니었다. 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5차 대회 보고 당시까지만 해도 김일성은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로 박정희 정부 타

22) 북한은 베트남전쟁 시기에 대미 군사도발도 감행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이다. 북한이 1968년 1월 23일에 미 해군 정찰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하자 미국은 북한이 북베트남과 ‘공모’해 미국을 공격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푸에블로호 사건 며칠 뒤 베트남인민군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구정공세’가 시작되자 이러한 추측은 더욱 설득력을 얻었다(정성윤, 2008: 255~259; 김정배, 2008: 119; 홍석률, 2012: 73). 그렇다면 당시 북한은 이러한 추측이나 의혹 제기에도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혔을까? 이에 대한 김일성의 공식적 해명은 북한-북베트남의 공모는 없었고 단지 ‘사상이 같아서 행동도 같았다’는 것이었다(김일성, 1983c: 170). 북한의 독자적 이해에 따른 독자적 군사행동이었다고 주장한 셈이다.

23) 김일성이 1965년 5월에 했던 관련 발언은 다음과 같다. “싸우는 월남인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국제주의적의무로 될뿐아니라 그것은 곧 우리 인민자신을 위한 것으로 됩니다. 남부월남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때려부시고 놈들의 코대를 꺾어놓아야 미제침략자들이 아세아의 모든 지역에서 쫓겨나게 되고 우리 나라의 통일도 빨리 실현될수 있습니다.”(김일성, 1982c: 375).

24) 예를 들어 김일성은 1966년 10월 조선노동당 2차 대표자회 보고에서 “남조선에서 혁명이 승리하면 북조선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위업은 성과적으로 실현될것”(김일성, 1982a: 465)이라고 주장했다.

도를 규정하고 있었다.²⁵⁾

그런데 1970년대 들어 중·미화해가 속도를 내면서 북한에게 불리한 정세가 조성되자, 북한은 닉슨의 중국방문을 “승리자의 행진이 아니라 패배자의 행각”(김일성, 1984c: 521)이라고 규정하며 자신의 난처해진 처지를 감춘 뒤²⁶⁾, 그동안 남조선혁명을 통해 몰아내야 할 대상으로 여겨왔던 ‘박정희 정부’와 통일문제를 직접 논의하기 시작했다.

물론 1970년대 초반 남북대화 당시 북한은 대외적으로, 특히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남북대화는 남조선혁명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거나, 평화통일은 남조선혁명이 일어나야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었다(홍석률, 2012: 256~258). 남조선혁명론을 포기하지 않았고, 남조선혁명을 위해 공세적·능동적으로 전술 전환을 했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외적 해명과는 별개로 1970년대 이후 북한의 노선 전환은 아래 이유들 때문에 방어적·수동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더 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김일성이 베트남전쟁 초기에 “결코 적들의 거짓선전에 속지 않을 것이며 오늘의 사태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 기대했던²⁷⁾ “남조선인민

25) 김일성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남조선혁명은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미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관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쑈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입니다. 이 혁명의 기본임무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내쫓고 그 식민지통치를 없애며 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고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움으로써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이룩하는데 있습니다.”(김일성, 1983a: 301).

26) 1970년대 초반 중·미화해 국면에서 김일성은 아래 발언처럼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다며 다분히 허장성세를 부리고 있었다. “미제는 이미 조선전쟁에서 한방망이 얻어맞았고 또 지금 월남전쟁에서 한방망이 얻어맞고있기때문에 쌍지팽이를 쥐고 절름거리면서 겨우 다니는 형편입니다. 그런것만큼 닉슨이 중국에 찾아와도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닉슨이 중국을 방문한 다음에 정세가 좋게 발전하면 그것을 혁명에 유리하게 리용하면 되는것이며 또 정세가 불리하게 되면 거기에 대처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있으면 되는것입니다.”(김일성, 1984c: 522~523).

27) 김일성이 일본 내 반전운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김일성은 1960년대 중·후반 일본에서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약칭 ‘베평련’), 전국학생공동투쟁회의(약칭 ‘전공투’) 등이 활발하게 전개했던 반전운동이(남기정, 2014: 75~90) 남한에서도 일어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들”은 1960년대 후반에 적극적으로 반전·반제투쟁에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이 공들여 구축해놓은 “남조선 혁명조직”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여파로 파괴됐고, 박정희 정부의 공안 통치는 나날이 강력해지며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둘째, 당시 김일성은 대결적 남북관계 유지를 힘에 부쳐하고 있었다. 1960년대 초반까지 전체 세출 중 10%를 넘지 않던 북한 국방비는 한·미·일 삼각동맹 출현, 베트남전쟁 확전과 북한의 참전, 미국과의 연이은 군사충돌²⁸⁾, 중국 내 문화대혁명을 둘러싼 북·중 갈등 등으로 안보불안이 커지면서 1967년~1971년 사이 30% 수준으로 급증했다. 김일성은 1970년 조선노동당 5차 대회에서 과도한 군비가 경제건설에 장애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나아가 군비경쟁의 한계나 불필요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1972년 6월 방북한 『워싱턴포스트』 기자에게는 “군비부담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는 심정까지 드러냈다(김진환, 2010: 142~145).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이닉슨 독트린에 따라 1971년 3월 실제로 주한미군 제7사단을 철수하자 1971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의 4기 5차 회의에서 남한 여당인 민주공화당과의 대화 의사를 처음으로 시사했다(김진환, 2012: 39~40). 김일성도 1971년 7월 15일 중·미가 정상회담 추진을 공식 발표하며 중·미화해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되자, 8월 6일 캄보디아 시하누크 국왕 환영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우리는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람들과 아무 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습니다”라며 남북 당국 대화 의지를 밝혔다(김일성, 1984a: 232). 남조선혁명에 따른 통일보다는 박정희 정부와의 대화를 통한 통일을 추진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북한이 남북대화를 제의한 이후 김일성의 공개적인 ‘남조선혁명’ 언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남조선혁명을 선포하더라도 더 이상 박정희 정부 타도를 언급하지 않은 점²⁹⁾ 등이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

28) 북한은 1968년 1월 미 해군 푸에블로호 나포에 이어 1969년 4월 미 해군정찰기 EC-121을 격추하며 미국과 충돌했다.

29) 김일성은 오히려 “남조선인민들”이 남북대화가 잘 되도록 박정희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김일성이 1971년 12월에 했던 아래 발언은 맥락상 그가 당시에 박정희

해줄 수 있다. 북한의 대화 제의에 박정희 정부가 호응하면서 1971년 9월에 마침내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시작됐고,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채택이라는 성과로까지 이어졌다(김진환, 2012: 41~44).

이처럼 북한이 남북대화 노선으로 나가면서 1960년대까지 단단했던 북한-북베트남 연대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일단 눈에 띄는 점은 북한의 북베트남 무상 지원액이 1970년대 들어 급감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북베트남 무상 지원액은 1965년~1968년 4년 동안 3,000만 루블에서, 1969년~1972년 4년 동안 1,070만 루블로 크게 떨어졌다. 1973년 북한의 북베트남 지원액 110만 루블은 1965년 1,200만 루블에 비하면 9%에 불과했고,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1972년의 200만 루블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었다(도미엔, 2014: 99~100).

한편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자 남베트남 정부와 서방 언론들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도 북한을 본받아 전투를 중지하고, 남베트남 정부를 인정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결과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은 중·미 화해를 중국의 배신행위로 여긴 것처럼 남북대화도 북한의 배신행위로 생각하게 됐다. 예를 들어 1972년 7월 12일 북베트남 외무성 관계자는 하노이 주재 헝가리 외교관에게 7·4남북공동성명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피력했다. 그는 “베트남 사람들만이 미제국주의와의 무장투쟁에 홀로 남겨지고 있다”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중국과 북한은 베트남 인민들이 미제국주의와 대항하여 싸운 피 묻은 투쟁의 성과를 이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고 한다(홍석률,

정부를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상대로 보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발언이다.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지만 남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남조선의 노동계급과 인민들 자체가 주인이 되어 수행하여야 합니다. (...)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한결같이 념원하고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특히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 내놓은 8개 항목의 평화통일방안과 우리가 지난 8월 6일에 한 연설에서 내놓은 남북협상제의를 남조선당국자들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여 계속 들고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닉슨이 멸망에 직면하여 베이징과 모스크바에 찾아가는데 박정희는 왜 북조선에 찾아가지 못하는가, 북조선에서는 민주공화당과도 협상하고 하는데 왜 그에 응하지 못하는가 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습니다.”(김일성, 1984d: 551~552).

2012: 259~260). 베트남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실질적인 지원은 축소하면서 베트남 인민의 투쟁으로 ‘어부지리’하려 한다고 충분히 생각할만한 사태 전개였다.

실제 북한은 베트남 인민의 끈질긴 투쟁에 힘입어 1970년대 초반에 자신의 안보불안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북한은 중국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1971년), 세계 비동맹운동 성장 등에 힘입어 1970년대 들어 “조선의 통일문제해결에서 주되는 장애물인 남조선 주둔 미제침략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철거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김일성, 1985a: 71)하고 있었다(김진환, 2012: 110~121). 그런데 1972년 여름을 지나면서 북한에게는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두 가지나 더 생겼고, 아래 인용문처럼 주한미군 철수 여론 조성에 이를 적극 활용했다. 하나는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 없이 통일하자는 남북 당국 간 합의(7·4남북공동성명)였고, 다른 하나는 1973년 1월 파리평화협정에 따른 베트남에서의 미군 완전 철수였다.

미국은 조선의 통일을 방해할것이 아니라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먼저 남조선에 와있는 미국군대를 끌어내가야 합니다. 미국군대가 남조선에 계속 남아있는것은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를 예견한 조선정전협정에도 위반되며 조선민족이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할것을 서약한 남북공동성명에도 배치됩니다. 미국은 지난해에 정전이 실현된 남부웰남에서도 자기의 군대를 철거시켰는데 정전이 된지 20년이 넘는 우리 나라에서 오늘까지 계속 남조선에 자기 군대를 주둔시킬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미국이 남조선에서 물러갈 때가 되었습니다(김일성, 1985b: 300).

구체적으로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1973년 4월 6일에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냈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1988b: 679~682), 1974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남북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달리 미국을 협상 당사자로 지목하며 북·미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나섰다(김진환, 2009: 157~158; 허 담, 1988b: 843~844).

이러한 북한의 당시 행보로 판단해볼 때,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이 7·4남북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³⁰⁾ 북한이 미국과 손잡으려 한다거나 ‘미제’와의 투쟁을 포기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북한은 당시에 베트남전쟁이, 엄밀히 말하면 미국이 ‘베트남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이 자신의 숙원 과제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를 해결하는데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하고,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협상을 요구했던 것이다. 만약 북한의 의도대로 미국이 협상에 나섰다면 베트남에게도 불리한 상황 전개는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에게는 미국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낼 힘이 없었다. 안보불안을 현저히 낮출 기회는 잡았지만 미국을 밀어붙일 힘은 없었던 셈이다.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박정희 정부와 미국에 붙어 자신들을 이용하려 한다고 의심 받고, 정작 미국을 ‘진지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힘은 없었던 것이 바로 1970년대 초반 북한의 처지였다.

4. 맺음말

1965년 한·일 관계정상화로 미국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미·일 삼각동맹이 완성됐다. 반면에 사회주의 진영은 중·소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분열과 갈등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한·미·일 삼각동맹에 맞서는데 점점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이 와중에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마저 승리한다면 북한의 안보불안은 한층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북한에게 베트남전쟁은 단순히 “싸우는 베트남 인민”과 “미제”의 전쟁이 아니었다. 북한에게 베트남전쟁은 궁극적

30) 오히려 7·4남북공동성명은 반(反)외세를 명시하지 않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보다 미국이 보기에는 더 급진적인 성명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으로는 북한 자신에게 가해질 안보위협을 미연에 막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야만 했던 전쟁이었다.

1960년대 초반부터 중·소 분쟁에 적극 개입하며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주장하던 북한은 1960년대 중반 들어 베트남전쟁이 과거 한국전쟁처럼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맞대결 성격을 띠게 되자 사회주의 진영의 ‘반제공동투쟁’을 선도적으로 주장하고 전투병 파병에도 솔선수범했다. 하지만 북한의 기대나 바람과는 달리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은 갈수록 심화됐다. 반대로 일본 군국주의는 완전히 부활하자 1970년대 들어서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의 반제공동투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낮추고, 아시아 혁명적 인민들의 반제공동투쟁, 반미반일투쟁을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북한은 베트남전쟁 초기 남한에서 반전의식을 매개로 남조선혁명의 기운이 무르익기를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남한의 반전운동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모험주의적 군사행동 탓에 남조선혁명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자 박정희 정부와의 대화노선으로 전환했다. 더불어 미군이 1973년 3월 베트남에서 완전 철수하자 7·4남북공동성명의 반외세 조항, 베트남에서 미군의 완전 철수 등을 명분으로 삼아 미국에게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완전 철수 등을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베트남전쟁 기간 동안 동북아시아에서 거의 외교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국가들, 아시아의 혁명적 나라들은 북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열과 갈등상태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남조선혁명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고, 북한은 오히려 박정희 정부를 대화상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일축했고, 북한이 바라던 주한미군 철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북한이 느끼는 안보불안은 나날이 커져갔다.

참고문헌

- 권쾌현(2010), 『아주 특별한 베트남 이야기』, 연합뉴스.
- 김광협(1988),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월남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원 할데 대하여」,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제Ⅱ집: 2기1차 회의~3기7차회의)』, 국토통일원.
- 김영남(1965), 「우리 당 대외 정책의 승리」, 『근로자』 제18호[1965년 9월 (하)], 근로자사.
- 김일성(1980), 「현계단에 있어서의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제1차5개년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하여(1954. 12. 29)」, 『김일성 저작집 9』,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82a),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1966. 10. 5)」, 『김일성 저작집 20』,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82b), 「일본교도통신사 전무리사 이와모도 기요시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65. 4. 19)」, 『김일성 저작집 19』,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82c), 「현시기 국가경제기관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65. 5. 25)」, 『김일성 저작집 19』,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83a),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70. 11. 2)」, 『김일성 저작집 25』,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83b), 「당사업을 개선하며 당대표자회 결정을 관철할데 대하여(1967. 3. 17~24)」, 『김일성 저작집 21』,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83c), 「청년들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선봉대가 되자(1968. 4. 13)」, 『김일성 저작집 22』,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84a),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 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1971. 8. 6)」, 『김일성 저작집 26』,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84b),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71. 9. 25)」, 『김일성 저작집 26』,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84c), 「당간부양성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71. 12. 2)」, 『김일성 저작집 26』,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84d),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직업동맹의 성격과 임무에 대하여 (1971. 12. 14)」, 『김일성 저작집 26』,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85a), 「이탈리아공산당 기관지 《우니따》지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74. 1. 29)」, 『김일성 저작집 29』,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1985b), 「미국조선친선공보센터 집행위원회와 잡지 《조선의 초점》편집국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74. 6. 16)」, 『김일성 저작집 29』,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배(2008), 「북한, 미국, 그리고 냉전체제: 1968년 Pueblo호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제27집, 115-144쪽.
- 김진환(2009), 「남북 군사관계 60년」,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편, 『남북관계사: 갈등과 화해의 60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_____(2010), 『북한위기론: 신화와 냉소를 넘어』, 선인.
- _____(2012), 『동북아시아 열국지 1: 북·미 핵공방의 기원과 전개』, 선인.
- 남기정(2014), 「베트남전쟁의 현실과 일본의 평화담론: 베평련과 전공투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6집 2호, 66-103쪽.
- 당력사연구소(2006), 『조선로동당력사』, 조선로동당출판사.
- 도미엔(2014), 「1975년 베트남전 종전과 북한정부의 대응: 베트남자료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48집, 93-133쪽.
- 멀 프리브나우(2012), 「베트남 상공의 북한 조종사들」, 『북한』 2012년 6월호, 북한연구소.
- 박성철(1988), 「전민족이 단합하여 범죄적인 ‘한일회담’을 분쇄할데 대하여」,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제II집: 2기1차회의~3기7차회의)』, 국토통일원.
- 박태호(1987),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2』, 사회과학원출판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1988a), 「최고인민회의 결정: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월남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원할데 대하여」,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제II집: 2기1차회의~3기7차회의)』, 국토통일원.
- _____(1988b), 「세계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내는 편지」,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제III집: 4기1차회의~5기7차회의)』, 국토통일원.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1982), 『조선전사 30』,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유인선(2002),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 윤대영(2013), 「1950년대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와 문화 교류: 1956년 조선 문화 대표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역사와 경계』 제80집, 187-222쪽.
- 이상숙(2007) 「1960년대 중반 북한-중국의 갈등과 북한의 자주노선」, 『북한학연구』 3권 2호, 151-172쪽.
- 이종석(2000),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중심.
- 이태섭(2001), 『김일성 리더십 연구』, 들녘.
- 정성윤(2008), 「1968년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 원인에 대한 연구」, 『국제정치연구』 제11집 2호, 247-275쪽.
- 조진구(2003), 「중소대립, 베트남 전쟁과 북한의 남조선혁명론, 1964~1968」, 『아세아연구』 제46권 4호, 227-256쪽.
- 한모니까(2003), 「1960년대 북한의 경제·국방병진노선의 채택과 대남정책」, 『역사와 현실』 제50호, 133-164쪽.
- 황일호(1993a), 「25년 만에 밝혀진 1·21청와대 기습사건」, 『월간중앙』 1993년 2월호, 중앙일보사.
- _____(1993b), 「북한의 '제2의 6·25' 작전」, 『월간중앙』 1993년 4월호, 중앙일보사.
- 허 담(1988a), 「현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제Ⅲ집: 4기1차회의~5기7차회의)』, 국토통일원.
- _____(1988b),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를 마련할데 대하여」,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제Ⅲ집: 4기1차회의~5기7차회의)』, 국토통일원.
- 홍석률(2009), 「위험한 밀월: 박정희·존슨 행정부기 한미관계와 베트남전쟁」, 『역사비평』 88, 216-243쪽.
- _____(2012), 『분단의 히스테리』, 창비.
- Jein Do(2013), *REVERSING FRIENDS AND ENEMIES: THE AMERICAN FACTOR IN THE SINO-SOVIET SPLIT AND NORTH KOREAN CRISIS MOBILIZATION 1962-1968*, a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로동신문』, 『연합뉴스』, 『조선신보』

North Korea's Diplomatic Policy during the Vietnam War Era

Kim, Jin Hwan

(Konkuk University, The Institute of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With the normalization of the diplomatic rel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1965, the Korean-American-Japanese triangle alliance, which had been America's long-cherished desire, was completed. On the contrary, the socialist camp began to walk the road of division and conflict because of deepened conflicts between China and U.S.S.R. In this situation, North Korea was required to put more resources and efforts in order to stand against the Korean-American-Japanese triangle alliance. If the U.S. won the Vietnam War, North Korean insecurity could become even worse. To North Korea, the Vietnam War was not merely a war between "Fighting Vietnam people" and "American imperialists." To the country, participation in the Vietnam War was inevitable ultimately in order to prevent security threat to be imposed upon North Korea.

The Vietnam War in the mid 1960s, like the Korean War in the past, developed into confrontation between the socialist camp and the capitalist camp, North Korea played a leading role in promoting the socialist camp's "joint struggle against imperialism" and took the initiative in dispatching combat troops. Contrary to North Korea's expectation or wish, however, the division of the socialist camp grew deeper. In contrast, Japanese militarism showed a sign of resurrection, and entering the 1970s, North Korea lowered its voice in urging the socialist camp to stand together against imperialism, and pressed strongly Asian revolutionary peoples to wage joint

battles against imperialism and against the U.S. and Japan.

In the early stage of the Vietnam War,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expected a high mood of revolution in South Korea through the medium of antiwar consciousness in Korea. However, the expected antiwar movement did not take place in South Korea, and rather its adventurist military actions lowered the possibility of revolution in South Korea. As a result, North Korea changed its line to conversation with Park Chung-hee's government. As the U.S. forces were fully withdrawn from Vietnam in March 1973, North Korea demanded a peace treaty with the U.S. and the full withdrawal of the U.S. forces in Korea on the ground of the anti-foreign-power provision in the 7/4 South-North Korea Joint Communique, the full withdrawal of the U.S. forces from Vietnam, etc.

Key Words

Korean-American-Japanese triangle alliance, conflicts between China and U.S.S.R, joint struggle against imperialism, Vietnam War, revolution in South Korea

투 고 일: 2015. 2. 12.

심 사 일: 2015. 3. 9.

게재확정일: 2015. 3. 10.